600만달러 '포괄적 뇌물' 밝혀질까

가족·친인척·관련자 주변 수사 막바지

검찰, 신문 준비·경호 대책 마련 착수

검찰이 이번주 후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낱낱이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쳐가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흘러나온 600만 달러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그동안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 반격을 거듭해 오면서 의혹이 증폭돼 왔다.

그동안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잇따라 조사해온 검찰은 이번 주 초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하루 이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한 마지막 조사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와 3억원, 그리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보낸 3만 달러의 '청와대행'에 모두 관여했고 '3자 회동'의 멤버이기도 한 점을 감안해 끝까지 정 전 비서관의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한다"며 1~2차례 더 불러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준비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초에 정 전 비서관 조사가 끝나고 그동안 수집한 진술조서와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이번 수사의 '정점'인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차례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노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29일 재보궐 선거가 있어 야권으로부터 '정치 수사' 시비가 일 수 있어 다음 주로 소환 일정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이후 다시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신문 준비는 물론 경호 대책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은 많지 않은 반면 조사할 분량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핵심적인 증거와 질문 사항을 추려 노 전 대통령의 해명에 대한 빈틈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 전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맡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봉하마을을 찾아 5시간10분간 머물다 돌아갔으며 이 자리에서 검찰 소환에 대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19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경수 비서관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盧 후원 강금원-박연차 캘수록 뚜렷해지는 차이

강금원 회장

박연차 회장

"강 회장은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이다"(이달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12일 같은 홈페이지)

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색깔이 이번 검찰 수사로 명확히 갈리게 됐다.

두 사람 모두 구속수감된 처지이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나는 이 두 후원자의 색깔은 보색대비(補色對比, 보색 관계인 두 색을 같이 놓을 때 서로 영향으로 더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를 이루는 모양새다.

"강회장은 벼락 맞은 것"

"박회장 사실과 다른말"

盧前대통령 엇갈린 평가

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낸 돈은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으로 검찰은 이 돈이 정상적인 투자금이어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낸 돈은 아직 의혹투성이다. 검찰은 그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보낸 1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 등 모두 6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도 검찰에서 이 돈을 정 전 비서관이나 연씨를 '종착지'로 준 게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박 회장의 진술을 씨줄과 날줄 삼아 포괄적 뇌물 혐의라는 그물망을 짜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런 보도가 나오자 즉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했다.

박 회장이 검찰에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7일 홈페이지에 '강금원이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애정과 안타까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박 회장과 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는 범주로 함께 묶였지만 이들 두 사람이 그다지 친분이 없는데다 후원의 성격도 다른 차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강 회장은 구속 전 "박 회장은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도 없고 돈으로 권력을 산 로비스트로, 나와는 질이 다른 사람이라 같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언짢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강 회장의 이런 언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굉장히 기분 나빠 했다. 오히려 박 회장은 강 회장을 자기와 같은 급수로 보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제 '어제의 후원자' 박 회장과 등을 지고 법정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히기 위해 날을 세워야 하고 동반자인 강 회장의 침몰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야말로 모진 운명에 놓이게 된 셈이다. /연합뉴스

"물증도 없이…혐의 벗는 계기될 것" 盧, 검찰과 일전 대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김해 봉하마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과의 일전에 대비하기 위해 긴박감 속에 검찰행을 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봉하마을에 상주하다시피한 상황이어서 온종일 사저에 머물며 대응 논리를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해 참여정부 출신의 참모들과 함께 수시로 숙의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노 전 대통령의 결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달러와 3억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결과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듯하다.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의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고 노 전 대통령은 '근래'에야 이 사실을 알게됐다는 최초 해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할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의 돈은 권 여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달되던 시점을 알지 못한데다 용처에 대해서도 권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세하게 밝히지 않은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해명할 공산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권 여사 역시 자금 수수사실을 털어놓긴 했으나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기대감도 묻어난다.

물론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해명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는 듯하다.

또한 '박연차 리스트'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정대근 리스트', '강금원 리스트'로 번지면서 봉하마을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서도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봉하마을에 정통한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혐의를 벗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보면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찾은게 아니라 주변 정황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취재 방해…예민해진 봉하마을 주민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다가오자 봉하마을 주민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선 사저 동향을 촬영하려는 취재진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이 수시로 승강이를 벌였다.

일부 주민들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정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인 마을 광장 안 골목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피해 주는 망원렌즈 촬영을 그만해라.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아예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봉하마을 전 이장 조용효(51)씨는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언론의 취재 경쟁도 지나칠 정도"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사저 주변을 경비하는 경찰은 사저 출입구로 들어가는 도로 한쪽 차선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취재차량과 관광객 차량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사저 주변 경비도 한층 삼엄해졌다.

앞서 봉하마을 주민 100여명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로 봉하마을은 실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올해 농사까지 손을 놓고 있을 정도"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사진기자들이 사저 정문을 촬영하는 지점에 농기계를 갖다놓아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연합뉴스